

통화권력의 분권화로 싹터... IT와 결합 기존 금융체제 위협

신기루인가, IT혁명인가 코인 이야기

1 가상화폐, 누구나 낸

채굴 가능 비트코인 2100만개
가상화폐 종류 1400개 등장



지난해 12월 17일 시민들이 서울 중구 비트코인 거래소 앞을 지나며 시세판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가상화폐가 전 세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가상화폐의 대명사인 비트코인의 경우 2년 전 가격이 40만원에 달해 당시 비웃음을 샀지만 최근 한 때 2800만원까지 폭등하며 대한민국을 가상화폐 광풍으로 몰아넣었다. 가상화폐는 기존 금융시스템을 비롯한 체제와 마찰을 빚고 있다. 이 같은 마찰은 세대간 마찰로도 확산되고 있으며 특히 기성세대와의 경쟁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있다고 주장하는 2030 세대에게는 새로운 탈출구로 각광받고 있다. 최근 '광풍'으로까지 평가받고 있는 가상화폐와 가상화폐의 원천 기술인 블록 체인(Block Chain)을 총 5회에 걸쳐 짚어본다. <편집자 주>

많은 이들은 가상화폐가 비트코인으로 시작됐다고 알지만, 사실 가상화폐가 최초로 등장한 것은 약 35년 전의 일이다. 일반적인 화폐는 모든 권리를 가진 중앙화폐시스템이 필요하다. 한국의 경우 한국은행이 원화를 발권하며, 미국에서는 연방준비은행(FED)이 달러를 찍어낸다. 이러한 화폐 시스템은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우선 화폐에 대한 모든 권리를 하나의 기관이 갖고 있어 비효율의 문제가 발생한다. 권한과 기능이 집약되기 때문에 그 기관과 화폐 발행체제를 유지·운영하기 위한 비용이 늘어난다는 것.

또 다른 문제는 중앙 기관에서 비합리적인 운영이 발생하거나 화폐 가치를 조작하더라도 외부에서 알기 어렵다는 점이다. 특히 FED는 사립은행임에도 화폐를 발행할 권리를 가지고 있어 무분별한 화폐 발행을 통해 인플레이션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추구한다는 지적을 받기도 한다.

마지막 문제는 도난이다. 현물로 존재하는 돈은 그 흐름을 명확히 파악할 수 없어 도난에 취약하다.

◆사토시 나카모토의 제안 이후 가상화폐 본격 대두
독립적이면서도 총량이 고정돼 있고

안전한 화폐를 만들고자 1983년 UC 버클리의 암호학자 데이비드 차움은 웹 보안에 쓰이는 RSA 알고리즘을 활용해 가상화폐 회사 디지털캐시를 창업했다. 거래내역을 익명화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지만 경영실패로 1998년 파산에 이르렀다.

그해 컴퓨터 공학자 닉 사보가 분산형 전자화폐 '비트골드'를 고안했다. 이 비트골드는 2009년 등장하는 '비트코인'의 블록 암호화와 검증 구조의 근간이 됐다.

전 세계가 금융위기로 커다란 충격을 받은 이후 2008년 10월 31일 세계 암호학 전문가들과 아마추어 등 수백 명은 한 통의 이메일을 받았다. 이메일 발신자는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익명의 인물이었다. 그는 "저는 당사자 간 일대일(P2P)로 운영되는 새로운 전자 통화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다"는 메시지와 함께 9쪽 분량 보

고서 링크를 보냈다.

현재까지도 정체가 밝혀지지 않은 이 인물(혹은 단체)이 만든 가상화폐가 비트코인이다. 비트코인은 채굴 가능 총량이 2100만개로 제한됐으며 코인의 흐름을 추적할 수는 없지만 코인을 채굴·거래한 이들에게는 기록이 남기 때문에 해킹을 통한 위·변조가 불가능하다. 현재까지 1650만개 가량이 채굴됐다.

비트코인 등장 이후 현재까지 약 1400여종의 가상화폐가 등장했고 비트코인 외에는 비트코인의 대안(alternative)이라는 의미로 '알트코인'이라 불린다.

이들 가상화폐는 다양한 방식으로 구분되는데 3가지 방식이 대표적이다. 작업 증명(PoW), 지분 증명(PoS), 중요도 증명(PoI) 등이 그것이다. PoW 방식은 더 많이 가상화폐를 채굴한 이에게 더 큰 보상을 하고 PoS는 각자 가진 가상화폐 지분에 비례 보상을 제공하는 형식이다. PoW는 비트코인이, PoS는 '퀀텀'이 대표적인 가상화폐다. PoI는 각자 거래 실적에 따라 중요도를 계산, 중요도가 높은 이에게 더 많은 보상을 제공한다. '뉴이코노미프루버먼트'가 대표 가상화폐다.

◆기존 금융시스템 위협하는 가상화폐 '규제'나 '진흥'이나 딜레마

가상화폐가 대두되면서 각국도 대응에 나섰다. 미국과 일본, 호주, 독일 등이 비트코인을 증권 또는 결제수단으로 인정하고 제도권 내에 포함했다.

중국은 사회주의체제 안정을 위해 탈중앙화를 기반으로 하는 가상화폐를 거

래를 모두 금지시켰다. 동시에 인민은행에 의해 중앙집권화된 자체 가상화폐 개발에 나섰다. 베네수엘라와 러시아, 에스토니아 등도 자체 가상화폐 발행을 준비 중이다.

세계 가상화폐 시장에서 비중이 15%에 달하는 한국에서도 규제 수준을 두고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가 투기라는 인식 때문이다. 그 배후에는 '김치프리미엄'이 있다. 김치프리미엄은 국내 가상화폐 가격이 다른 나라에 비해 30% 이상 비싼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국내에 유입되는 가상화폐가 제한적이기에 발생한 현상이다.

우리나라의 외화송금법에 따라 개인은 외국에 5만 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을 송금할 경우 그 사유를 증명해야 한다. 해외에서 가상화폐를 사오는 것은 송금 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며, 따라서 국내에서 가상화폐를 취득하려면 국내에서 채굴된 가상화폐를 사거나 해외에서 불법적으로 조달해야만 한다. 결과적으로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지면서 가격이 높아진 것.

때문에 일각에서는 외화송금법을 완화해 국내로 들어오는 가상화폐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재정거래를 허용하는 순간 투기의 원인이 된 김치프리미엄은 사라진다"며 "더 추가해야 할 규제와 풀 규제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규제만 더해 우물 안 개구리가 되면 김치프리미엄은 더 높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세성 기자 sesung@metroseoul.co.kr

한국은행 노조 “가짜화폐에 적극 대응해야”

“쓴소리 하며 비판받는데 속명”

한국은행 노동조합이 최근 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가상화폐에 대해 한은의 적극적인 선제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1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은 노조는 전날 '서민 흘리는 가짜화폐에 적극 대응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가상통화 변동성과 투기성은 가상화폐가 화폐의 가장 기본적인 거래수단 기능을 전혀 할 수 없음을 잘 보여준다"면서 "통화당국이

거짓화폐 문제점을 주시하고 좀 더 빨리 경고하지 않은 것은 매우 뼈아픈 일"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경제 '와치독(Watch Dog·감시견)' 역할을 하는 중앙은행은 화폐가 무엇인지 타인들이 규정해주길 기다릴

것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한은이 적극 나선다면 많은 이들의 반발에 직면하겠지만 쓴소리를 하며 비판받는 것이 중앙은행의 숙명"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성명서에서 윌리엄 마틴 미국 전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과거 언급한 바 있는 "파티가 무르익었을 때 술을 치우는 것이 중앙은행의 역할" 문구를 인용했다.

한편 한은은 앞서 가상화폐(암호화폐)

가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지난 9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TF는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열풍이 거세지며 통화정책, 금융안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인식 하에 지급결제·금융시스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중앙은행 차원에서 분석했다.

한은은 현재 가상화폐를 법정 화폐로 볼 수 없고 일종의 상품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봉준 기자 bj35sea

급성 인플루엔자 A형 임상시험 대상자 모집

인플루엔자 A형 감염 환자에서 임상시험용 의약품이 안전하고 효과적인지 평가하기 위한

자격 요건

- ▶ 만 19세 이상 64세 이하
- ▶ 시험 약 투여 전 48시간 이내 질환 발병한 대상자(체온이 $\geq 38.0^{\circ}\text{C}$ 또는 호흡기 및 전신 증상 발병 대상자)
- ▶ 참여불가:
 - 인플루엔자로 항바이러스 치료 또는 연구 참여 전 14일 이내 항바이러스제 투약력이 있는 자
 - 연구 참여 전 21일 이내 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받은 자
 - 현재 B,C형 감염 또는 HIV 감염 대상자

연구 절차

- ▶ 선별검사 후 평가하여 최종 선정.
- ▶ 본 연구에 등록 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항체치료제 1회 투여 및 채혈 등의 기본 검사 진행.
- ▶ 약 110일의 기간 동안 7-10회의 방문 (상황에 따라 3일간 입원도 가능함)

참여 혜택

- ▶ 임상시험 기간 동안 전문 교수진의 집중적 진료 및 관리
- ▶ 임상시험의 모든 검사비용(혈액검사, 뇨검사 등) 및 임상시험용 의약품
- ▶ 입원비 및 소정의 교통비 등

실시 기관

- ▶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이화여자대학교의과대학부속 목동병원,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건국대학교 병원, 고대안암병원, 연세의료원 세브란스병원, 순천향대학교 부천 병원,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평촌한림대 성심병원, 인하대학교병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한림대 춘천 성심병원, 건양대학교 병원, 전남대학교 병원, 영남대학교 병원, 부산대학교 병원,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외 21개 기관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의 콜센터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문의처 1800-6883

※ 임상시험 참여로 인해 불편사항이 발생하거나, 위험(부작용)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